

국제농업협력사업(ODA) 및 해외농업개발 정책방향



박 종 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시설사무관
jmpark@korea.kr

1. 서론

농업분야 OD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는 한편, 경제개발을 위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이 빈곤을 극복하는데 농업분야 성장이 타 분야 비해 2~4배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농업분야 원조 비중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 감소되었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증가세로 반전된 바 있다.

* OECD DAC회원국의 농업분야 양자 지원금액은 '03~'08년 기간중 연평균 13% 증가

* 농업분야 다자원조약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World Bank Group의 지원 비중 : ('80~'82) 30% → ('99~'01) 7% → ('06~'08) 12% → ('10~'12 계획) 13~17%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의 농업·농촌 발전 경험 전수를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농업·농촌 분야 ODA지원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다.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림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추진체계를 지속 개선해 가고 있다.

그러나, 농림분야 ODA지원 정책 추진 초기단계이며,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업분야 ODA중심의 국제농업협력사업 발전방안(‘13.8월)”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옥수수, 밀, 콩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 곡물 수입국 세계 제6위에 해당하는 등 곡물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곡물 수입선은 미국·호주 등 주요 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이고, 4대 곡물 메이저에 대한 의존도가 50% 이상을 보이는 등 곡물 수입선이 편중되어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주기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세계식량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곡물가격이 2010년 7월과 2012년 7월에 다시 급등한 바 있다. 2008년에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증가(2011년 70억명 → 2021년 77억), 신흥국의 경제성장,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 등에 따른 수요증가가 주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는 가뭄 등 기상이변, 수자원 부족 및 사막화, 주요 국가의 곡물 수출 제한 등에 따른 공급량의 변동성이 심화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곡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국제곡물 가격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 불안정한 국제곡물수급 상황에서 국제적으로는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국내적으로는 주요 곡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하는 동시에, 우리 농산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12.9월)”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본 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중인 국제농업협력사업(DOA)과 해외농업개발 중장기 정책방향과 2014년도 중점추진계획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국제농업협력사업(ODA) 방향

2.1 현황 및 평가

2.1.1 추진현황

- 농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련기관은 전문 분야별로 예산 확보 하여 사업 추진중
 - (농식품부) 개도국 농업·농촌개발을 위한 기획

협력*, FAO·IFAD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 컨설팅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소속기관(검역검사본부·농산물품질관리원·중자원 등)은 분야별로 초청연수, 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한 개도국 기술전수 위주로 추진
-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아시아(AFACI)·아프리카(KAFACI) 국가와의 다자간기술협력협의체를 통한 농업기술 및 지식전수에 초점
- (산림청)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UN사막화방지협약(UNCCD) 등 다자기구와의 협력사업에 중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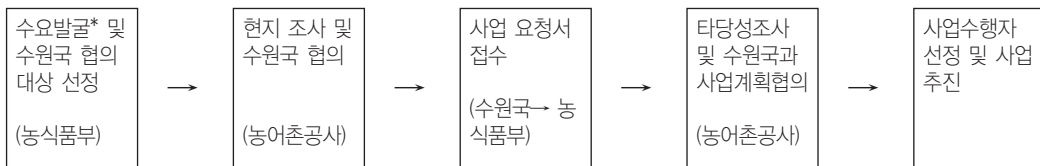
2.1.2 성과

- '06년 국제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한 이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 정비
 - 농식품부의 국제농업개발협력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
 - * ('06) 7억원 → ('08) 14 → ('10) 42 → ('11) 100 → ('12) 105 → ('13) 128 → ('14) 141
 - 사업을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등 소규모·단기성 협력지원방식에서 기획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 위주로 개편(농림수산 ODA발전방안, '11.5월)
 - 농림 ODA사업의 총괄조정 및 관련기관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위원장: 제1차관)*' 구성·운영('10.1월)
 -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학계·민간 전문가 등

- 15인 이내로 구성
- 법적 뒷받침을 위해 국제농업협력 관련 규정이 반영된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제정·시행 (‘12.1월 시행)
- 개도국과의 양자간·다자간 농림협력 협의체계 구축
 - KOPIA 설치 국가 확대 : (‘10) 10개국 → (‘12) 15 → (‘13) 20
 - 우리나라 주도로 다자간 농림협력협의체 출범 및 운영
 - (농진청) AFACI(‘09.9월 출범, 11개 회원국) 및 KAFACI(‘10.7월 출범, 18개 회원국) 출범
 - (산림청)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UNCCD) 제 10차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11.10), AFoCO 출범(‘12.8, 11개 회원국)
- 기획협력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규모화, 관련기관 및 민간업체간 연계협력 등이 이루어지면서 현지주민 소득증대 및 민간투자 확대 등 사업성과가 나타나기 시작
- * (베트남) 농식품부-농진청이 협력하여 ‘채소 재배 기술개발 및 계약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09~‘15)’을 지원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업체는 생산된 농산물을 전량 구매·판매 및 투자 확대, 현지주민 소득증대 등 상생협력 도모

- * (캄보디아) 농식품부·산림청이 협력하여 ‘산림 복구 지원사업(‘11~‘15)’ 추진으로 민간기업의 캄보디아에 대한 조림 투자 계기(6만ha) 마련
- FAO, IFAD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을 위한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 확대
 - FAO에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관리자를 파견(‘12.6월)하고, 지속적 사업 확대를 위한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12.11월)
 - * FAO와 신규 사업 발굴 및 검토를 위한 연례협의회를 개최키로 협의
 - IFAD와 보충기금조성 MOU를 체결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 사업(‘12~‘15)’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우리부와 외교부(‘13.8월) 및 안행부(‘12.1월)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부처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시너지 제고 도모
 - 안행부와 협력하여 미얀마에서 농업·농촌개발 및 영농기술전수사업 추진 중
 - 안행부 : 새마을운동 교육, 생활환경개선(식수 개발, 교량설치, 지붕개량 등), 새마을 복합센터 건립 등
 - 농식품부 : 영농기술지원(벼농사, 비닐하우스, 양계·양어 등), 농업기자재 지원(농기계 등), 영농조직 결성 등

〈 현행 농식품부 기획협력 ODA사업 추진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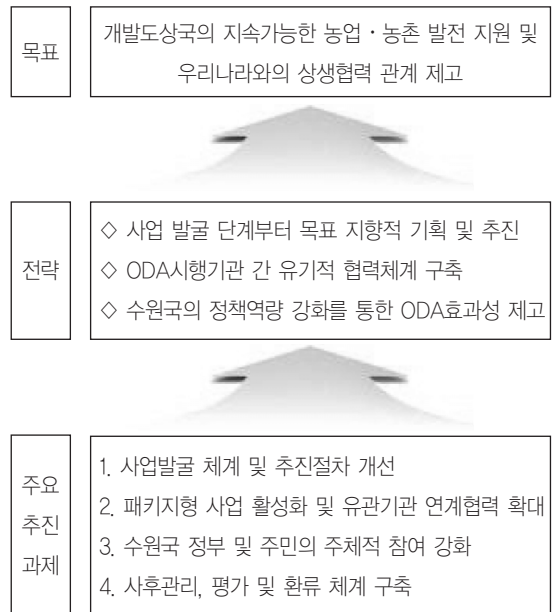
2.1.3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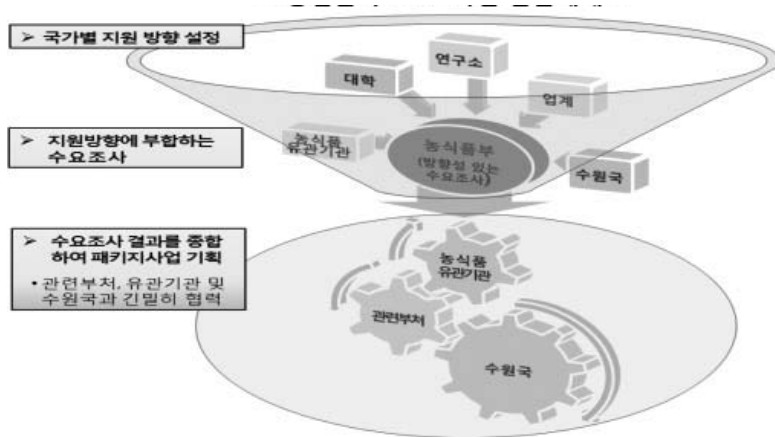
- 국가별 ODA 지원 전략 없이 국지적·단기성 위주의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성과제고에 한계
 - '13년 추진중인 기획협력 ODA사업*(12개 국가 14개 사업)은 상향식 사업수요 발굴 및 추진으로 국가별 지원 방향성 부족
 - * 수요발굴은 농식품 유관기관, 수원국, 학계, 해외 농업개발 업체 등을 통해 발굴
 - 국내 주요 농정과제(해외농업투자, 농자재 수출, 구제역 예방 등)와의 연계성을 통한 수원국과의 상생협력 노력도 부족
 - 해외농업개발, 동물질병예방 등의 농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일부 추진중이나, 종합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
- 농림분야 ODA 추진 컨트롤 타워 기능이 취약함에 따라 유관기관간 사업조정 및 연계협력 미흡
 -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ODA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에 따라 관련기관 사업간 유기적 연계협력은 어려운 실정
 -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협력은 소극적 연계에 불과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는 제한적
 -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는 정보공유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농림 ODA사업의 총괄 조정 및 연계협력 역할은 미흡
 - 유·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기재부, 외교부 주관)에서는 지역별로 유관기관 사업간 연계협력 위주로 논의함에 따라 농림분야 특성을 반영한 사업간 연계협력 논의는 어려움
 - 기재부 또는 외교부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농림분야 사업간 연계협력 및 조정을 이끌어내

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

- * 농림분야 ODA는 농업관련 가치사슬(생산-가공-유통 등)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특성이 있음
- 완료되는 기획협력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사업평가 및 환류를 통한 사업발전 노력 부족
 - 수원국 정부 및 주민 등의 사업 참여가 미흡하거나 소모품 부족 등으로 사업 완료후 지원 시설 및 장비 등의 방치 우려 상존
- 사업추진 경험·지식 축적 및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
 - 농림분야 ODA사업에 참여하는 국내의 관련기관 및 전문가의 인력 pool 및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2.2 목표 및 전략





〈농림분야 ODA 사업 발굴체계〉

2.3 주요추진과제

2.3.1 사업발굴 체계 및 추진절차 개선

- 사업 수요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의 일반현황, 농업여건, 인적자원 등 정보수집 및 공유 체계 구축
 - 국가별 정보는 CPS 등 기 확보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집
 - * 국가별 해외농업개발 투자환경조사, KAPEX 및 ODA 사업 계획 자료, 세미나·워크숍 등에서 발표된 country report 등
 - 효율적인 정보수집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에 전담조직(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구성·운영
 - 현재 운용중인 “해외농업개발 종합정보시스템(www.oads.or.kr)”을 활용하여 ODA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농업개발과의 연계 도모
- 중점 지원 국가 및 지원 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수요 조사함으로써 선택과 집중, 목표성·방향성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

- 지원방향은 국별협력전략(CPS), 수원국 농정여건, 해외농업투자 및 교역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농림 관련기관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위원장 : 농식품부 차관)’ 심의를 거쳐 확정
- 사업 발굴은 지원방향에 부합되는 사업 위주로 수요조사 하여 현지 조사 및 수원국 협의 등을 통해 추진
 - 외교부(KOICA), 기재부(EDCF) 등 관련부처와의 정보공유(필요시 공동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발굴 및 추진
 - 다만, KAPEX(농경연) 및 KOPIA 사업(농촌진흥청) 등은 수원국 의견이 중요함을 감안, 수원국과 협의하여 협력과제 발굴
- 다자간 협의체*와의 공동협력 사업 등은 식량안보, 기상이변, 동·식물 질병예방 등 글로벌 이슈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

* (농식품부) FAO, IFAD, OIE 등, (농진청) AFACI, KAFACI 등, (산림청) AFoCO, UNCCD 등

- 동·식물 질병예방, 기상이변 대응을 위한 조립 등의 사업은 지원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역단위의 사업발굴 및 추진

- 사업발굴은 국제기구, 다자간 협의체 회원국 등과 협의하여 추진

○ 관련기관 및 사업간 실질적 연계 협력 강화를 위해 수요조사 시기를 앞당겨(n-2년 연말 → n-2년 상반기) 사업발굴 및 기획

- (n-2년 상반기) 중점 지원국가 및 지원방향을 설정(5월까지,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하여 사업수요조사(5~7월) 실시

- (n-2년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발굴 및 기획하여 사업간 중복방지 및 연계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검토·협의

- (n-1년 상반기) 현지조사 및 수원국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 및 기관간 사업조정 실시(4~6월)

2.3.2 패키지형 사업 활성화 및 유관기관 연계협력 확대

○ 일회성·소규모 프로젝트형 사업에서 벗어나 중장기·목표지향적 패키지형 사업으로 전환

- 사업유형을 농업의 산업적 특성과 농촌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i) 농업 가치사슬 연계형 ii) 농촌 종합개발형으로 분류

i) 농업가치사슬 연계 유형

■ 시장 접근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등을 통해



〈 가치사슬 분류 〉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농산업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

ii) 농촌종합개발 유형

■ 농업생산성 향상, 특산품 개발 등의 농가소득 증대 사업과 생활환경개선(교육·복지 등 포함)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 발굴 및 기획 단계부터 관련부처 및 기관의 참여 활성화

예 1) 농업가치사슬 연계유형

- 정책 컨설팅(농경연)→영농기술지도(KOPIA) →시범사업 및 보급(농식품부)→사업확산(KOICA, EDCF, 국제개발은행 등) →사후관리(NGO 활용 등)

예 2) 농촌종합개발유형

- 농업·농촌개발(농식품부, 농진청 등), 상하수도, 도로교통, 전력, 보건복지, 교육, IT 등 (유관부처, KOICA, EDCF 등)

- 수원국 여건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지 주민의 자체적 운영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적정기술 지원

- 사업기간을 현행 3~4년에서 7~10년의 중장기로 전환하되, 3~5년 주기로 중간점검 및 평가를 통해 계획 조정·보완하여 추진

- 우리의 농업·농촌 발전경험과 비교우위가 높은 ODA사업의 분야별 콘텐츠 확충 및 표준모델 개발
 - KAPEX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제별 모듈*을 개발하고, KSP(기재부 주관)와 연계하여 분야별 모델 개발 및 발전
- 농림 관련기관, 유관부처 및 기관 등의 실무 협력 체계 강화
 - ‘글로벌농림협력 실무협의회(위원장 : 국제협력국장)’를 통해 지원전략, 패키지형 사업 기획 및 기관별 역할 분담 등 논의
 - ‘유·무상 관계기관 협의회(기재부, 외교부 주관)’를 활용하여 관련부처 및 기관의 유·무상 ODA사업 연계 협력 방안 등 논의
 - * (무상 ODA) 보건복지, 교육, IT 등 (유상 ODA) 관개시설, 도로교통, 전력 등
 - 외교부(KOICA) 등이 추진하는 농림분야 ODA사업의 발굴 및 기획 단계부터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
 - * 외교부, KOICA 등 관련부처·기관 공동으로 농림분야 ODA통합전략 마련 추진(13.10월)
- 수원국 현지에서의 농림분야 ODA지원체계 강화
 -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협의체(KOICA, KOPIA, ODA사업 관계자 등 참여)를 활성화하여 정보공유 등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 현지 정착 우리나라 교민 및 기업 등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사업의 성공 및 지속 가능성 제고
 - 농림분야 ODA 추진에 적극적인 현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유관사업 추진 관련 활동경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 KOPIA의 재외공관 및 KOICA 등에 대한 농림분

- 야 ODA 발굴 및 사업 추진 지원 역할 강화
-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전문성과 네트워크에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접목하는 공동협력 확대
 - FAO, IFAD, OIE 등 농업관련 국제기구와의 효율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소규모 신탁기금을 대형화·규모화 추진

2.3.3 수원국 정부 및 주민의 주체적 참여 강화

- 수원국 정부 및 주민이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
 - 수원국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 컨설팅사업(KAPEX) 시범추진(13년) 및 연차적 확대
 - * 13년 라오스(농업협동조합), 캄보디아·에티오피아(농업기술개발 및 보급) 등 3개국 시범 추진
 - * 14년 미얀마, 베트남, 우간다 등 3개국 지원 예정
 - 컨설팅 과정에서 수원국 정책사업 발굴 및 ODA지원 추진
 - 사업 초기단계부터 수원국의 사업추진 관련 핵심전문기관 및 주요 인사의 사업 참여 유도
 - 수원국의 핵심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및 역량개발 지원 강화
 - 핵심 인력과의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국가간 농업협력 및 향후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
 - 현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ODA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사업 확대
 - * 14년 라오스를 대상으로 협동조합을 주제로 추진중인 KAPEX사업과 연계하여 가나안농군학교(해외 12개국에 설립)와 민관협력 시범사업 추진 계획

- ODA사업 타당성 조사, 세부 계획수립 등 의사결정 과정에 수원국 정부, 전문가 및 주민 등 참여 강화
- 농업협력위원회 등의 대화채널을 활용하여 수원국 정부가 ODA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 시행중 사업의 발전적 추진방안, 신규사업 발굴 등 논의
 - 필요시 농업협력위원회 등 개최시 농림분야 ODA협력 분과위원회를 별도 운영

2.3.4 사후관리,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 수원국 협의 및 사업 선정 단계부터 사후관리 방안 고려
 - 사후관리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지에서 확보·지원 가능한 기자재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
 - 수원국 정부 및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사후관리 조직체계 구성 및 역량향상 교육 강화
 - 사후관리 소요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기관간 사업연계 및 협업, 정보공유 등을 통해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
 - KOICA 봉사단을 활용한 사후관리, 수원국 정부의 사후관리 예산 확보 유도 등 추진
 - 사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14년)
- 사업모니터링 및 사업 완료후 평가 강화
 - 사업평가의 객관성 확보 및 환류 강화를 위해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과정에 재외공관, 수원국, KOICA 등 참여 추진
 - 평가지표, 기준 및 방법 등을 포괄하는 농림분야 ODA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 농촌경제연구원 및 농어촌공사 등의 농림분야 ODA 지식 및 경험 축적·확산 기능 강화
 - 세미나·워크숍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ODA지원 성공 및 실패사례 등 정보를 지속 수집·보급
 - 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교육 교재 제작 등 추진
- 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향후 사업 수요발굴 및 추진시 활용

2.4 2014년도 중점추진 계획

- (패키지형 사업) 미얀마를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패키지형 시범사업 기획 및 추진
 - 농식품부 및 소속기관, 농진청 등 농림관계기관이 역할 분담하고, EDCF, 민간농업투자가 연계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 농림 ODA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추진방향 설정(2월)
- (새마을운동) 미얀마*, 라오스**를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연계 시범사업 추진
 - * (미얀마) 안행부 새마을운동 ODA와 연계하여 "농촌개발 및 영농기술전수사업" 추진('13~ '16, 총 28억원)
 - ** (라오스) 가나안농군학교 참여에 의한 "농업·농촌 역량개발 민·관 협력사업 추진" ('14~ '16, 총 15억원)
- (정보 공유) 온라인, 오프라인 정보수집 및 공유활동 활성화
 - 농경연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를 설치(1월)하여 협력대상국의 농업 및 인적자원 정보수집 및

- D/B구축,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칭)국제농업협력 파트너십 포럼”을 구성, 농림 ODA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활용
- o (초청연수) 농정 고위급 대상 ‘농업·농촌정책 연수과정(1년 이상)’을 개설하고, 강사진은 농정수립·추진 경험이 많은 퇴직 공직자 활용방안 검토
- o (국제사회와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공동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식량안보 등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간 협력 강화
 - FAO와 공동으로 ‘아프리카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사업’ 신규 추진 (‘14-’17, 총 20억)
 - ASEAN+3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구축 지원 (‘14~16, 21억원)
- o (사업관리 강화) ODA 사후관리, 평가 및 환류 강화
 - ODA 사업 실태를 점검(상반기)하여 필요시 사업추진방향 조정
 - 평가지표·방법 등을 포괄하는 ‘농업분야 ODA 자체평가 지침’ 마련(2월)

3.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2012~2021)

3.1 추진경과

1960~1970년대에는 「해외이주법」을 제정(1962.3월)하여 정부 주도로 남미 농장개발 등을 추진하였으나, 영농에 적합하지 않은 농장을 선정하였고, 영농의지가 부족한 등으로 실패하였다.

1980년에 이후에는 연해주, 중국 등을 대상으로 ‘민간기업’ 중심으로 해외농업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일부 기업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 영

농경험 부족 등으로 많은 기업이 철수한 바 있다.

2009년 정부는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09~’18)」을 수립하였고,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인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을 제정·시행(‘12.1.15)하면서, 민간의 해외농업개발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는 3년마다 10년 단위의 해외농업개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2년에 처음으로 해외농업개발에 관한 10년 단위 법정 계획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3.2 해외농업진출 현황 및 평가

3.2.1 성과

o 2013년까지 125개 기업이 25개국에 진출하였으며, 66.3천ha를 개발하여 264천톤의 곡물을 확보하였다. 해외농업개발에 의한 국내 반입물량은 2010년 424톤에서 2013년에는 13,976톤으로 크게 증가 추세에 있다.

* 진출 기업수(누계, 개) : (‘09) 35 → (‘10) 68 → (‘11) 85 → (‘12) 106 → (‘13) 125

* 개발면적(천ha) : (‘09) 18.8 → (‘10) 26.9 → (‘11) 42.3 → (‘12) 64.4 → (‘13p) 66.3

* 곡물 확보량(천톤) : (‘09) 24.7 → (‘10) 107.7 → (‘11) 170.7 → (‘12) 218.2 → (‘13p) 264.4

* 국내반입 실적(톤) : (‘10) 424 → (‘11) 796 → (‘12) 10,539 → (‘13p) 13,976

o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국제개발협력과, ‘11.6월)와 한

- 국농어촌공사(해외농업개발지원센터, '08.7월)에 해외농업개발 전담 조직 설치
 - 해외농업개발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시작
 - 해외농업개발 기업 대상 용자(연리 2%) 지원, 상환기간도 개선(3년거치 7년 상환 → 5년거치 10년상환)
 -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동산 담보 관련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기업의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이 11.03%에서 0.48% 수준으로 감소
 -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정('12.1월 시행)
 - 해외농업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다양한 전략 추진
 - 정부는 정부간 협상을 통해 토지정보 제공 등 제도적 안정성을 지원하고, 민간은 생산·유통 등 사업에 집중
 - 해외농업개발과 ODA지원을 연계하여 해외농업개발의 효과를 높이면서 상대국 정부와의 우호적 여건 조성(win-win 효과)
 - * 필리핀 해외농업개발지역에 농기자재, 농산물 수확후 처리시설 등 ODA지원('10~'12)
 - 민·관 공동으로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 관련정보의 공유(www.oads.or.kr),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추진
- ### 3.2.2 문제점
- 해외농업 진출 기업 수와 투자 규모가 증가하여 왔으나, 아직 투자 규모가 선진국의 유사 기업과 비교하여 소규모
 - * 용자지원기업 평균 개발면적: ('09) 539ha → ('10) 750 → ('11) 1,050
 - 해외농업투자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실적은 아직 없는 실정
 - 국가별 해외농업개발 경쟁이 심화되어 우량 해외농업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은 점점 어려워짐
 - 해외농업개발이 지역별·분야별로 편중됨
 - 진출지역이 동남아·연해주 등 일부지역에 편중
 - * '11년말 현재 해외농업개발 면적은 러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가 84%
 - 곡물 위주의 지원에 따라 농산업의 외연확장, 식품산업 육성 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 해외농업개발로 확보된 곡물의 국내반입 실적 저조
 - * '11년 해외농업개발로 확보한 곡물(17.1만톤) 중 국내반입량은 796톤
 - 해외농업개발 기본계획('09 마련)을 본격 추진한 지 3년이 지난 현 단계에서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음
 - 단기간에 곡물메이저 수준의 경쟁력 확보는 어려운 실정
 - * 일본의 경우 브라질 세하도지역 농장개발에 20여년, 곡물유통사업(제노) 정착에 30여년 소요
 - 특히, 농장형 해외개발은 안정적 생산을 하기까지 일정 기간 소요되므로 유통과 연계된 국내반입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
 - 해외농업개발에 특화된 대규모 영농, 유통, 농기계 등에 관한 전문가가 부족하고,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한 정보도 부족
 - 개별 기업차원에서는 국가별·지역별 농업투자 정보 입수에 한계

3.2.3 해외사례 평가 및 국제사회의 동향

- 일본, 중국, 중동 등 곡물수입국의 식량안보 노력, 유럽 투자기관의 바이오연료 확보 등을 위한 해외 농업투자 확대 추세
 - 일본, 중국은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해외 곡물확보사업 추진
 - 일본은 민간주도(젠노, 종합상사)로,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지방공기업 주도(지방정부 금융지원 등)로 추진
- * (일본) 마루베니 社は 미국 가빌론 社를 인수 ('12.5, 50억불), 연간 4천만톤 규모의 세계 최대 곡물유통기업으로 발전, 젠노(全農)는 산지-수출-일본내 사료회사에 이르기까지 계열화 완료
- * (중국) '01년 농업의 밖으로 나가기(저우추취, 走出去)를 국가 전략으로 정하였으며, 기업의 해외 투자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급
 - 중동국가들은 수단, 파키스탄 등 지리적 인접국가에 해외농업개발을 늘리는 경향
 -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제3세계 국가에서 대규모 농지확보
- 한편, 대규모 해외농업투자 증가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면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짐
 - 개도국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지역공동체 해체, 개발 과정에서의 환경파괴 등이 주요 이슈로 대두
- FAO, World Bank 등 국제기구는 해외농업개발 투자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및 투자 기본원칙 논의중
 - 이러한 논의결과는 농업투자에 관한 국제규범으

로 발전 가능성

- * FAO 식량안보위원회는 '토지·수산·산림자원 소유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 마련(12.5월)
- * World Bank, FAO, IFAD, UNCTAD 공동으로 농업투자에 관한 7가지 원칙을 제시하여 논의중이며, FAO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13년 말까지 기본 원칙 마련 예정
 - ① 토지 및 자원에 대한 권리 존중 ② 식량안보 확보 ③ 투명성, 선량한 관리 및 투자 환경 확보 ④ 협의와 참여 ⑤ 기업의 책임감 있는 투자 ⑥ 사회적 지속 가능성 ⑦ 환경적 지속 가능성

➡ **외국의 해외농업개발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해외농업 투자에 관한 국제 규범의 틀을 존중하면서 추진할 필요**

〈참고〉

일본 젠노의 해외농업 진출 성공 시사점

- 젠노의 국제곡물유통사업 개요
- '60년대 중반 뉴올리언즈에 진출하여 사료용 옥수수 구매 사업 추진, '79년 수출전문회사 ZGC(Zen-Noh Grain Company) 설립
- 미국에 곡물 수출엘리베이터*와 산지엘리베이터**를 확보하여, 사료곡물을 일본내 28개 사료회사에 안정적으로 공급
 - 연간 취급량 : 수출엘리베이터 1,100만톤*, 산지엘리베이터 1,200만톤**
 - * 수출엘리베이터 저장 규모 10만톤, 연간 회전율 평균 110회
 - ** 산지엘리베이터 저장 규모 220만톤, 연간 회전율 평균 5회
- 젠노 계열내 상시 확보량 : 400만톤 이상
 - 저장시설 : 290만톤(60개 산지엘리베이터 220, 수출엘리베이터 10, 일본 국내 수입항 사이로 60)
 - 운송선박 : 110만톤(미시시피 수계 바지선 60, 태평양 운송선 50)

■ 전노의 성공요인

-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한 실 수요자로서 미국 산지로부터 일본내 사료회사까지 완전 계열화하여 안정성 확보
- 유통단계 사업에서 시작하여 생산단계 사업으로 확장
- 유통의 병목부분에 우선 진출하고, 투자 및 위험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분참여, 시설이용 및 사업제휴 등을 활용
- 위기상황에 대비한 물량을 확보하되, 평상시에는 현지판매 및 제3국 판매를 신중적으로 활용
- 철저한 준비후 최단기간에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계획 수립

14개국을 중점 진출지역으로 선정하여 진출 지역 다변화 도모

- 중점진출지역은 생산·수출잠재력, 투자여건, 유통여건 등을 고려, 해외농업개발로 확보된 곡물의 국내 반입여건이 유리한 지역 선정

권역	중점국가	권역	중점국가
동북아	러시아(연해주, 아무르주)	동유럽	러시아(흑해연안), 우크라이나
동남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북미	미국, 캐나다

3.3 목표 및 전략

목표	해외농업개발로 '21년까지 국내 곡물소비량의 35% 확보
----	---------------------------------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국가별 농업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진출 지원 ◇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투자 촉진 및 네트워킹 강화 ◇ 세계식량안보 차원의 상생협력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	--

주요 추진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 다변화 2. 해외확보 곡물 국내 반입 활성화 3. 해외농업개발 기업 육성 4. 해외농업개발 지원체계 내실화 5.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	--

<중점진출 지역 선정기준>

- i) 생산·수출 잠재력 : 연평균 500만톤 이상 생산, 일정량 이상 수출(밀 80만톤, 콩 26, 옥수수 180) 또는 연평균 20%이상 수출 증가 국가
- ii) 기업 투자여건 : 우리 기업이 해외농업개발 진출해 있는 국가
- iii) 유통여건 : 연간 25천톤 이상 수입 실적,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
- iv) 중앙·서아시아, 북·서·남유럽 권역은 생산 곡물을 주로 유럽 및 아프리카로 공급, 대양주는 진출여건 불리, 아프리카 권역은 국내반입 여건 불리 등으로 제외

3.4 주요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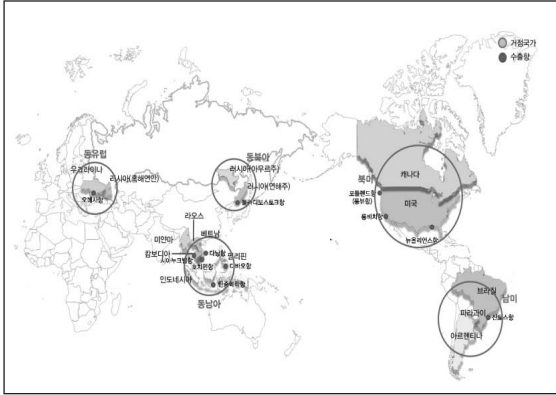
3.4.1 해외농업개발 진출지역 다변화

3.4.1.1 중점진출지역

○ 곡물수급 위기 대처 능력 제고 차원에서 5개 권역

3.4.1.2 단계별 진출 전략

- (농장개발) 농업 유망지역의 면적확보 후 인근지역으로 확장, 규모화를 통해 현지 유통망과 연계기반 마련
 - (1단계) 기계간된 농지 확보 또는 현지농장을 인수하거나 지분참여 방식으로 진출 후 시험재배



- 단계를 거쳐 본격 생산 체제 구축
- (2단계) 운영중인 농장인근의 미개간지 개발을 통한 면적확대 등으로 규모화 추진, 농기계·농자재·저장 및 가공산업 등의 진출
 - (3단계) 생산이외에 계약재배, 수매 등으로 규모화를 강화하여 경쟁력 확보한 후 현지 유통망과 연계
 - (유통망 구축) 곡물 유통망(수출·강변·산지EIL)을 확보한 후 생산·수집·저장·가공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여 경쟁력 확보
 - (1단계) 곡물유통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하여 메이저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거나 지분 참여를 통해 수출EIL 확보
 - (2단계) 산지곡물 확보를 위하여 산지 엘리베이터 구축 또는 생산자 단체와 제휴하는 등 다각화 추진
 - (3단계) 곡물 생산 및 유통망을 구축한 후 생산·수집·저장·가공·유통 등 전 과정에 걸친 계열화 추진

〈 단계별 진출 계획 〉

구분	1단계 〈교두보 확보〉	2단계 〈확산 및 규모화〉	3단계 〈경쟁력 확보〉
농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해외 농업개발 관심 확산 ○ 해외농지 확보 및 개량 ○ 시험재배 등을 통한 적정 작목 선정 및 재배기술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확보 면적 확대 ○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산지유통과의 연계 ○ 전후방 연관 산업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생산 및 지역 농민과의 계약재배 ○ 산지유통 기반 구축 및 수출 유통망과 연계 기반 마련
유통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메이저 등과 전략적 트러십 구축 ○ 미국 유통망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강변 엘리베이터 확보 등 사업 영역 확대 ○ 브라질 등으로 곡물 유통망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수집-저장-가공-유통 등 전 과정에 걸친 계열화 추진

3.4.2 해외확보 곡물의 국내 반입 활성화

- 해외곡물의 국내반입에 유리한 유통형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유통형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범위를 확대
 - (현행) 건조·저장·가공시설 설치비 → (개선) 곡물 매입비 등에도 지원
 - * 곡물 매입 및 보관, 자금 지원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 * 미농무부는 미국산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국내업체에게 수입대금을 선지급하고 후상환하게 하는 수출신용보증제도(GSM-102, 한국은 '12년 8억 USD 규모 이용 가능)를 운영
- 해외농업개발로 확보한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TRQ물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수입권 공매제도 활용 등)

- 물류사업을 추진하는 해운사·종합상사 등의 곡물유통사업 참여 유도
- 현지 유통비용 절감 및 투자위험 감소를 위해 현지 유통업체의 시설 이용 및 사업 제휴 등의 파트너십 강화
- 국내 실수요업체의 해외농업개발 참여 유도
 - 식품·사료업체 등 국내 실수요업체의 해외농업개발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해외농업개발 기업과의 상호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 해외농업 기업이 생산한 곡물의 품질 향상 지원
 - 현지에 적합한 종자개발 및 보급, 수확후 관리 기법 등 다양한 유통, 식품가공 관련 연구개발 지원
- 곡물수급 비상 상황시의 해외곡물 국내 반입 관련 매뉴얼 마련
 - 국제곡물 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위험 수준에 따른 단계별 대책 마련
 - 세계 곡물수급 동향 및 재고상황, 주요 수출국의 품목별 수출량, 곡물 수출국가의 주요 수출항·수출경로 등 정보 관리

3.4.3 해외농업개발 기업 육성

3.4.3.1 해외농업개발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다각화

-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추진
 - 해외농업개발 자금지원 대상품목 확대
 - 곡물확보에 중점을 두되, 바이오에너지 작물, 조사료, 국내 식품원료(사탕수수, 커피, 유지작물 등)로 공급되는 작목으로 확대
 - * 식량안보 관련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우선 지원
 - 정부 융자지원과 함께 농식품 모태펀드,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활용한 투자재원 확대 및 다각화

추진

- 투자 촉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설립 유도
- 기관 및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를 위해 해외농업개발투자회사 등에 대한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 해외농업개발 투자 로드쇼를 주기적으로 개최
- 국내 반입실적 등 해외농업개발 성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특별용자 지원(무담보 등) 추진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업의 해외농업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세제혜택 부여
- 농산물 재배와 농자재·가공·유통 등과의 계열화를 통한 가치사슬이 형성되도록 전·후방 연관산업 동반진출 강화
 - * (농자재) 비료, 농약, 농기계 등 (가공) 식용유, 식품공장 등 (유통) 도매 등
 - 해외투자여건 조사 등 현지 조사, 해외농업개발 투자유치 설명회 등에 관련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
 - 해외농업개발 기업과 연계 진출하는 전·후방 연관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3.4.3.2 전문인력 육성 및 컨설팅 지원

- 대규모 조방형 농업, 국제 곡물유통, 해외진출 전략, 경영 및 재무관리 등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강화
 - 해외농업개발 업체 종사자 또는 진출 예정자 등의 실무교육 및 재교육 등을 위해 단기 전문교육과정(3~6개월) 운영 지원
 -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농업개발 전문

- 대학원 개설 유도 및 선진국에서의 전문분야 교육 이수기회 부여
- 해외농업개발에 참여할 젊은 인력의 저변 확대 추진
 - 농과대학에 해외농업개발 관련 교과과정 개설 지원
- * 예) 해외농업개발 관련 서머스쿨 프로그램을 개설한 대학에 학생들의 해외농업 현장견학 등을 위한 항공료 등 지원
 - 해외농업 관련 학위논문 준비 대학원생이 해외농업개발 현장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실험 비용 및 현지 체재비 일부 지원
 - 인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농업개발 기업 채용과 연계
- 교육비 등은 정부, 관련 민간기업, 대학 등이 분담하여 지원
- 영농기술·법률·경영·자금운용 등에 대한 분야별, 지역별 전문가 pool 구성 및 컨설팅 지원 확대
 - 국내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퇴직 전문인력, 해외 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컨설팅 지원
 - 국내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관련 업계·학계와의 심포지엄, 워크숍 등을 통한 정보교환 기회 제공
 - 기 진출 해외농업개발 기업의 성공 및 실패사례 수집 및 보급

3.4.3.3 민·관 협력 진출

- 정부는 해외농업진출 국가와의 농업협력MOU 체결 등 대화채널을 마련하여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의 기반 조성

- 정부는 기업의 토지확보, 행정절차 이행,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
- * (사례) 한-필리핀 농업장관간 '농산업복합단지(MIC)에 관한 MOU'(11.11.21)를 체결하고, 양국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MIC추진위원회 구성(양국 농업부, 필리핀 토지개혁부, 환경자원부, 투자청, 경제자유구역청 등 참여)
- 민간기업의 초기 투자 위험도 완화, 민간주도 개발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해 민간·공공 공동협력 진출 추진
- 유무상 ODA를 해외농업개발과 연계하여 기업의 원활한 해외농업개발 정착 지원 및 진출국가와의 우호적 여건 조성
 - 농업에 활용될 사회기반시설(도로, 전력, 관개시설 등)을 ODA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 및 기업 부담 완화 추진
 - 기획재정부(EDCF) 및 외교통상부(KOICA)와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하에 ODA 중점협력국 선정 및 국가별 협력전략 마련시 해외농업개발 관련하여 적극적인 고려
-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의 해외농업 진출 농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활동 활성화
 - KOPIA 설치 확대 및 해외농업진출 기업의 현지에 적합한 재배작목 선정 및 재배기법 기술지원 활성화
- * KOPIA 설치국가 : ('09) 6개국 → ('10) 10 → ('11, '12) 15 → ('13) 20
- 농업기술 지원을 받은 현지 농가와 해외농업 진출기업이 상호 발전하도록 계약재배 등 추진

* KOPIA가 베트남에서 감자생산기술 지원을 받은 현지 농가와 (주)오리온 베트남 현지법인간 계약 재배를 통해 농가는 소득향상, 기업은 고품질 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상호발전 효과 발생

3.4.4 해외농업개발 지원체계 내실화

3.4.4.1 해외농업 투자환경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 국가별 · 지역별 농업자원조사 및 투자환경조사 확대

- 국가별 농업자원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별 농업정책 및 제도, 투자환경 등 변화 정보 적기 제공
- 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의사결정 및 진출전략, 기 진출 기업의 사업 확장 전략 등 마련을 위한 맞춤형 투자환경조사 지원 확대

- 개도국의 농업관련 자료 확보 지원을 위해 농업협력위 등 정부 채널을 통한 자료 확보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협력위 등을 통한 자료 확보, (외교통상부) 주재국 동향 정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TRA 등) 사업 정보

○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정보 수집 및 관리 기능 강화

- 해외농업투자 관련 정보수집 및 관리 기능을 연차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외농업개발협회로 이관
- 정보관리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농업개발협회에 (가칭)“해외농업개발 정보센터” 설치 · 운영

3.4.4.2 기관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해외농업개발 주요 정책 논의 및 조정을 위해 해외농업개발심의회(위원장 :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관) 운영 내실화

- 농림관련 기관*간 해외농업개발 진출 기업 지원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녹색사업단 등

- 관련부처 및 기관의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등 공조 강화

* 자금지원 및 세계혜택(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등), ODA지원(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해외정보수집 및 외교적 협력(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 해외공관 및 KOTRA 등의 현지 정보제공 및 기업의 해외농업 진출 지원 협조

○ 해외진출 기업 주축으로 설립된 해외농업개발협회(12.5월 설립)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보교류 강화

- 해외농업개발협회의 투자타당성 조사, 교육훈련, 정보수집,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안내, 관련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등 지원역할 강화
- 해외진출 권역별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 기업간 네트워킹 및 정보공유 유도
- 기업진출이 활발한 거점지역 중심으로 세미나 · 워크숍 개최 등 활성화 지원

3.4.5 세계 식량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

3.4.5.1 개도국 식량안보 지원 확대

- 수입 의존성이 높고 식량안보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생산성 향상 지원 등 농업개발협력을 강화하는 win-win 전략 추구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참여 등 국가간 상호 식량안보 협력 강화
 - * 국가별 쌀 비축물량(총 787천톤, 우리나라 150천톤)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약정 물량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

3.4.5.2 국제곡물시장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FAO, APEC 등 국제기구와의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식량안보 관련 협력 강화
 - FAO 주관 농산물 시장정보시스템, APEC의 아시아·태평양 식량안보 정보 플랫폼 등 구축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
 - 식량위기 발생시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포럼*, APEC 비상식량 대응 메커니즘 등과의 협력 강화
 - * RRF(Rapid Response Forum) : 식량위기사관 계국의 고위급이 참석하여 대응방안 논의
 - 해외 농업투자에 관한 국제규범 마련에 적극 참여
- 곡물수출국의 수출제한조치 규제 등을 위해 G20·APEC·UN 등 다자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출국과의 양자 협의도 병행 추진
 - * '12.5월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된 APEC 식량안보 농업장관회의에서 식량 수출국의 수출제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측 주장 반영

- * '12.8.23일 대통령은 곡물가격안정을 위해 G20 정상에게 서한 발송

3.5 2014년 중점추진 계획

- (영농지원센터) 사업준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영농지원센터를 중점 진출 지역에 설치(3월 연해주)
 - 단순 사업비 지원 방식 지양, 기술 지원, 애로사항 해소 및 러시아 對官 업무 지원 강화
 - * 연해주 운영 성과에 따라 동남아시아('15) 등으로 확대 검토
- (3자 협력체계 구축) 생산·유통·국내 수요업체 3자간 협력을 지원하여 현지 생산 및 국내반입 확대
 - 3자간 역할분담(생산 증대·물류 개선·수급 매칭 등)으로 연해주 확보 곡물의 국내 반입량을 전년 대비 30% 증대
 - * 한·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연해주 농업 및 물류 투자 확대) 이행 차원에서 3자(현지 생산자, 해운사 등 물류업체, 전분당·사료 등 수요업체)간 협의체 구성('13.11월)
 - 우리부와 3자 기업 합동 연해주 생산현장 및 물류 실태조사(3월)
 - 극동지역 농업 투자확대 논의를 위해 관련 기업 참여 한-러 비즈니스 포럼 개최(6월)
- (지원체계 및 관리 강화) 진출 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지원
 - (자금 지원 대상품목)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요가 많은 식품원료, 바이오에너지 작물로 확대
 - 용자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자금 집행의 철저 및 용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강화

- * 30억원 초과 융자금은 집행 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 제3자 담보제공 협약서 의무 제출 등
- (ODA 연계) 유·무상 ODA 사업과의 연계 진출을 통해 해외농업개발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13~ : 필리핀 시범사업)
- * 필리핀 MIC 사업 지구 내 농촌개발사업 신규 추진(총 사업비 27억원, 14년 3억원)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개정) 해외농림자원(농축산물, 임산물) 별로 종합계획 수립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등 추진체계 개편(12월)
- * (현행) 농·축산물, 임산물(농식품부장관) → (변경) 농축산물(농식품부장관), 임산물(산림청장)

4. 맺음말

미얀마는 외국으로는 한국과 처음으로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 경제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파트너 국가로 한국을 지명하였다. 개

발도상국을 출장 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연예인 사진을 걸어놓은 가정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며, 우리나라를 벤치 마킹하려는 개발도상국이 늘어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부패, 투명하지 못하고 예측 가능성이 희박한 업무처리 등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농업국가인 동남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은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인다.

국제농업협력사업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이 아직까지 초기단계이지만, 향후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새로운 시장인 개발도상국으로의 진출은 우리 농업계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글로벌화를 위한 우리 농업계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기획: 최진용